

---

## 2005 총선 이후의 한일관계

김성철 (세종연구소)

---

일본사회의 시스템을 움직여 가는 철학은 점진적 진화를 통한 장기적 발전원칙이다.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화적으로 개혁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2005년 9월 11일 총선에서 고이즈미 수상의 승리는 개혁을 원하는 일본국민들이 민주당에로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고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개혁을 선호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 같은 양당제를 마련하여 미국의 선거결과와 연동되는 정당시스템을 형성하여 미일간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구상이 있어서, 미국에 공화당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일본에도 자민당정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국내적으로는 일본국민 중 개혁을 지지하는 온건보수세력의 확대강화와 일본 자민당내부의 정치개혁 추진, 우정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일본 경제시스템의 개혁가능성이 두드러진다. 경제적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국민들의 경제 재부상과 강한 국가 일본의 재건에 대한 여망이 결집되어 표현되었다. 고이즈미 수상은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하여 일본이 당면한 경제문제와 외교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사명을 띠게 되었다. 자민당은 헌법개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미일동맹의 강화유지가 재확인되었고 일본외교의 기본적 연속성이 보장되었다. 일본과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움직인다고 본다면, 고이즈미 3차내각의 외교정책은 부시 2기의 외교정책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다. 부시 2기의 외교정책이 비교적 온건노선으로 변화했듯이, 고이즈미 3차내각의 외교정책도 온건노선을 취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6자회담에서 대북한 협상자세를 취하고 중국과 한국 등에 대한 대아시아 외교에서 우호협력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2005년 8월 15일 고이즈미 수상의 대아시아 사과발언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고이즈미 외교의 실패로 간주되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의 진출이 무산된 주요 원인이 중국과 한국에 대한 대아시아외교에서 실패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일본의 전략이 미국에게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데 있다. 이번 사례의 교훈은 일본외교가 미국의존 일변도로 나아가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고, 대아시아외교에서 주변국과 우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한 고이즈미 수상 자신이 일본의 안정적 번영이 한국 및 중국과의 평화적 우호협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선린외교정책을 실행하기를 기대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중국견제를 위한 미일동맹의 강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한경제의 재건, 장기적인 한반도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6자회담에서도 한미일간에 조율이 되어서 보조를 맞춘다면 북핵문제의 해결에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미중일과 한반도의 갈등상황은 6자회담과 같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제도화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고 협력을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 한일간에 여러 현안이 있는데 그들을 사안별로 분리하여 시기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쟁 및 식민지 피해보상문제, 징용자 유골 반환문제,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문제 등은 사안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궁해 나가고, 문화교류와 경제협력 및 자유무역협정도 병행해서 진전시켜 나가고,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관한 한미일 공조를 위한 한일협력은 강화시켜 나가도록 한다.

고이즈미 승리 이후 일본은 국내적으로, 일본 정치체제의 개혁, 파벌정치와 정경유착 구도의 개혁, 우정민영화를 통한 민간경제의 활성화 추진, 연금 보험 세금 등의 제도개혁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4년 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면서 미일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일본 정치사회의 전반적 보수우경화 속에서, 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일본의 정체성과 국가이익 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국민단합체제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일본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한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일본의 보수강경화가 대북한 강경책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혹은,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 해 나올 수도 있고, 역사교과서 문제가 확대 증폭될 수도 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지속될 수 있고, 군사력증강과 함께 해양 자원 등의 문제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2006년 9월 임기까지는 고이즈미 수상이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쓰면서 한국 및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일본의 정체성과 국가이익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양면성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일본의 정치사회의 전반적 보수화 속에서 고이즈미 수상은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정책입장을 취할 수 있고, 납치문제 해결과 북일관계 개선에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9월이후 후계자 선택에서 장래 일본정치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겠고,

헌법개정문제와 미일동맹의 강화유지가 주요한 안건이 될 것이다. 고이즈미 수상에게는 국내 정치 경제 시스템의 개혁이 우선과제이므로 대외적으로 분쟁을 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한일관계가 협력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수행되어야 할 사항들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협력, 6자회담 지속과 제4차 공동선언문의 이행문제, 중유 제공, 전력 제공, 경수로 건설 등에 관한 일본의 협력, 북일간 납치문제의 해결, 북일관계의 개선과 국교정상화, 개성공단과 원산지역 개발 등 일본의 투자유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 역사공동연구, 역사교과서의 공동집필 등이다.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장기적인 관계이고 항상 경쟁하고 경계하면서도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할 말을 하고 갈등과 대립 속에서 교류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 일본이 반드시 불이익을 얻고 반대만 하지 않도록 적절히 상호의존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구체적 사안을 분리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은 강경하게, 부드럽게 대응할 것은 부드럽게 대응하도록 한다. 역사관련 문제와 독도문제는 강력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고,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는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북일간 납치문제의 해결에 중재협력을 하면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고, 한일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한국은 북한과 일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서 장기적으로 일본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한일관계에도 새시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한일간에 선린우호협력관계는 가능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력의 차이를 넘어서 수직적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한일관계를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세계화와 정보화 및 지역협력이 강조되어 가는 상황에서 세계민주주의와 개인주의가 널리 퍼지는 가운데 전근대적인 국가중심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했다면 더 이상 망언을 하지 말고, 역사공동연구를 통한 공동의 역사교과서 집필에 협력해야 한다. 한일간에 상호의존의 형태가 구성되고, 영토 및 자원과 어업분쟁 등에서 공생의 협력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국제적 힘의 배분관계에서 일본은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이어서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인식을 전환해서 패권주의로 나가지 않고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 한일간에 신뢰관계를 쌓아가야 한다. 한일간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선의의 경쟁과 positive-sum game을 통한 공생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양대 경제세력권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높이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동아시아 차원

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한일간에 정치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한일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 가운데, 언어와 인종 및 국민의식에서 유사성이 있고, 상호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신뢰관계를 정립해 가야 한다. 한반도는 타의적으로 분단되어 국제사회가 책임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면서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도록 일본의 협조를 요청하고, 한일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북일관계의 개선, 북일 국교정상화의 추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북한체제의 진화와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일협력이 가능하다면 매우 바람직하겠다.

<2005년 10월 13일 미래전략연구원>